

군산형 일자리 활용되나

지역상생형 일자리 유력 후보지 거론 따라

지엠, “매각의지 강해… 몇몇과 타진 중”

문 대통령 전기차 공약 새만금도 후보지 거론

군산이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난해 5월말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군산형 일자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뉴스에 따르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모델의 타 지역 확산 후보군과 관련해 “군산, 구미, 대구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산을 거점으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는 송하진 전북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북은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새만금 산업단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소형 전기차 ‘나니고’로 유명한 대창모터스, 전기버스 제작 업체인 에디슨모터스 등과 한국지엠 협력업체 등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

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 기아테크, 중앙제어, 포밍 등 12개 회사는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체 부지의 25%인 30만㎡(약 9만7500평) 가량을 매입,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군산시 등과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만금은 인프라가 부족해 전기차 제조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시설이 갖춰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군산공장의 경우 제조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을 가진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이 곳에 전기자동차 자율기반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지만 공장 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군산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129만㎡(약 39만평)의 부지에 연간 27만대 규모의 완성차

승용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국지엠의 생산기지였다. 차체-프레스 공장, 도장-화성공장, 조립공장, 디젤엔진공장, KD 공장 등 7개의 주요 단위 공장과 주행시험장, 출고장, 5만급 수출전용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자동차 수출전용부두도 함께 갖췄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설립 후 20년 가까이 협력업체 130여곳과 함께 1만 2000여명을 상시 고용했다.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절반 이상을 도맡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제네럴모터스는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고, 군산 공장은 5월 말부터 가동을 멈췄다.

지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다만 부지가 넓고 규모도 큰 만큼 아직 적합한 매각대상을 정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도,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몇몇 업체들과도 매각 여부를 타진 중”이라며 “가격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설비 활용 가능성 등 적합성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공장을 매입, 군산형 일자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관련 논의가 오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기자

전북도, 미세먼지 처방 실효성 높인다

2023년까지 저감 대책 추진

전북도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환경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5년 동안 7,980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4㎍/㎥→17㎍/㎥로 30%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18년 대비 8%(24㎍/㎥→22㎍/㎥) 개선은 목표로 설정해 평상시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비롯하여 6개 분야 23개 핵심사업에 전년 대비 851억원이 증액된 1,293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단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Ý축사 등 배출원 관리를

비롯한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가적으로 중점 추진한다.

한편, 도는 2018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PM2.5 기준)를 2017년 대비 14.3%(28→24㎍/㎥)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었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더해 지역의 대기오염원이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보다 비산먼지, 생활성 연소,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올해는 한층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 3,658대를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버스 및 전기자동차 등 875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186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비산먼지 및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봄 겨울철 건조기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에는 도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기업(23개소)에 대해 매년 이행계획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 및 시설개선 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셋째 생활성연소(버 보일러 등 농산물잔재물) 부분은 도민들의 동참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 이장협의회 등을 활용한 도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시군 중심의 주기적인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정확한 정보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를 확대 설치(24→29개소)하고 도내 유입되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권역별 대기질 특성 파악과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원 규명을 위한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한다. /김정태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장남일(1956. 9. 16.생 2018. 12. 24.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 법원 구남선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사건번호: 2019년단144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구남선
- ▶ 피상속인: 망 장남일(1956. 9. 16.생 2018. 12. 24. 사망)
- ▶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13-4 (서완산동 1가)
- ▶ 공고인: 장성경
-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9. 2. 7.
- ▶ 공고기간: 2019. 2. 13. ~ 2019. 4. 12.
- ▶ 주소: (청구대리인 김준영의 송달주소) 전주시덕진구 둔사평1길9 (덕진동 1가, 스카이블루빌) 101호 한울법무사무소 010-3703-781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경제 성장·질적 전환 계기”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도 안착 위해 적극·진취적으로 제도 운용 당부

또다른 장벽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안내자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안건을 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이라며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규제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과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새로운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의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 입장에서 또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해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부처가 친절 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주시기 바란다”며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